



인터뷰 ▶4면

주파수 정책의 기본? ... “공익과 공공복리의 증진”

신년특집 ▶6면

2015년 방송계 전망과 과제

오피니언 ▶7면

[칼럼] 2015년, 방송의 공적기능 회복을 기원하며

국회 VS 정부, 700MHz 주파수 입장차 ‘여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으로 시청권 보장해야” ... “통신으로도 활용해야”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 업계 간 힘겨루기가 올 한 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 용도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정부가 이 논의 자리를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12월 26일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 용도를 논의하기 위한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조해진·심학봉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뿐 아니라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부가 상정한 안대로 700MHz 주파수 중 20MHz 폭(718~728MHz, 773~783MHz)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월 21일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인 88MHz 폭의 용도 결정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미래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700MHz 주파수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미래부·방통위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 보고 뒤 이어진 논의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용뿐 아니라 통신용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선 잔여 대역인 88MHz 중 54MHz(채널당 6MHz)를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HD 방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상파 UHD 전국 방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소 9개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계 전문가는 “UHD 방송은 돈을 내고만 봐야 하는 프리미엄 방송이 아니라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누구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지상파 UHD 전국 방송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잔여 대역을 UHD 방송용뿐 아니라 통신용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 대역 분배

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700MHz 잔여 대역에서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부의 계획대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700MHz 주파수 중 일부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이미 그 대역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단속 유예기간인 2020년 12월까지의 700M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용으로 우선 배분하자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2021년에 지상파 디지털 TV(DTV)가 종료되니 우선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DTV 대역을 재배치하면 통신이 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존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어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KBS 관계자는 “얼마 전 방통위가 EBS에만 다채널 방송(MMS)을 허용했는데 미래부의 700MHz 주파수 정책과 방통위의 MMS 정책 이면엔 700MHz 주파수 배분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꼼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주파수 할당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래부의 시간끌기가 주파수 소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속도 붙는 통합방송법 ... 법안 처리 쉽지 않을 듯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 작업이 유료 방송 분야로 한정돼 있고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민원 처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 방송 규제 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원안 그대로 보고했다. 2013년 5월 ‘유료 방송 규제 체계 정비’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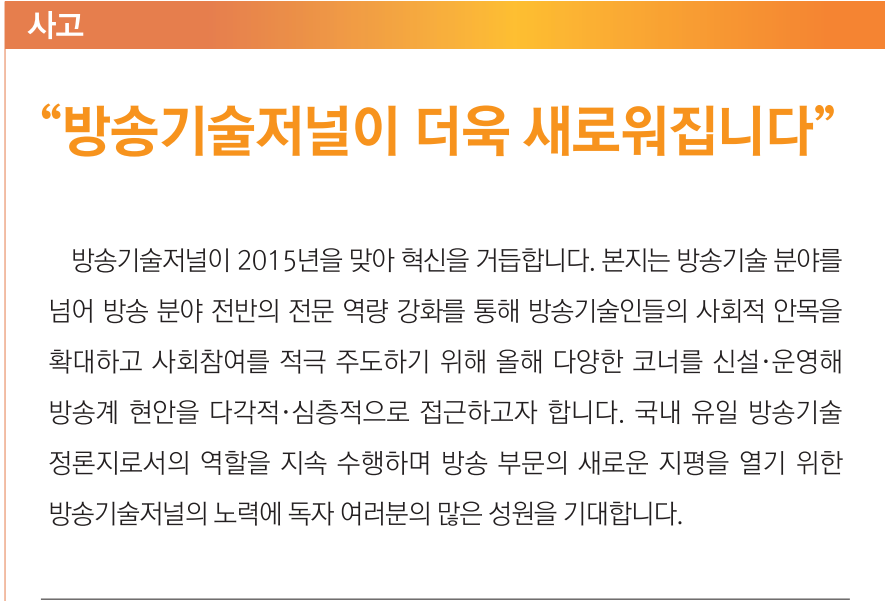
마련된 안건으로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 유형 및 사업 분류 체계 개선 △진입 규제 완화 △검열 규제 근거 신설 △금지 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현행 방송법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IPTV법의 IPTV를 삭제해 TV·라디오·데이터 방송으로 통합하고,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PP)과 IPTV법상 IPTV 콘텐츠 사업을 PP로 통합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방통위는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주문형 비디오(VOD)나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일반 PP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 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꾸준히 직사채널 허용을 주장해온 IPTV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공지채널 허용은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도 생각한다면 직사채널을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도 장르에 한정하는 장치를 두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T 진영과 반 KT 진영으로 나뉘어 격돌해온 합산 규제는 우선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



“방송기술저널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방송기술저널이 2015년을 맞아 혁신을 거듭합니다. 본지는 방송기술 분야를 넘어 방송 분야 전반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기술인들의 사회적 안목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코너를 신설·운영해 방송계 현안을 다각적·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국내 유일 방송기술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며 방송 부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방송기술저널의 노력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인터뷰 · 좌담 통한 전문성 확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만큼이나 방송 관련 논의들 역시 다변성과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파워인터뷰> 및 <난상토론> 코너를 신설해 복잡다단한 방송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방송 정책과 국민을 위한 미래 방송의 방향은 무엇인지 방송계 안팎의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논의의 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방송기술인과의 소통 강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방송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방송기술인을 만나다>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 있는 방송기술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방송기술영어> 코너를 신설해 방송계 안팎에 방송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방송계 이슈 및 현안 심층 접근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방송 부문의 현안과 주문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기존 ‘기획’ 섹션을 보다 심화해 방송계의 현안과 이슈를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 보고

로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점유율 제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후 일몰(규제가 자동 폐지되는)하는 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상파방송과 IPTV 간 경영제한 근거도 신설해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 공정 경쟁 관련 사항도 보완됐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 콘텐츠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 행위 대상과 유형을 일원화했다. 또 IPTV 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회계 분리 의무를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로 확대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2월 까지 더 구체화해 이후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보고한 통합방송법이 유료 방송에 국한돼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같은 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

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통합방송법 논의가 사업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시청자 권리 등 시청자 영역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은 “통합방송법이 유료 방송의 규제 완화만 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송이라는 영역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무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공적 영역과 시청자의 영역을 도외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복지에 대한 보안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정비만 먼저 시행하고, (방통위의 계획대로)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를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용어〉

증강현실 이용한 ‘증강방송’

‘증강방송(AB:Augmented Broadcasting, 増強放送)’을 알기 위해서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증강현실 앱이 화제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 가구회사 이케아의 앱은 판매가구를 사이즈와 색상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비자의 집에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모았다.

‘증강방송’은 이와 같은 증강현실을 방송에 적용해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증강 콘텐츠로 겹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방송을 말한다.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와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송에서도 증강 콘텐츠를 이용해 시청자의 이해

와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증강방송의 종류에는 비디오 장면이 방송사가 미리 정한 증강 콘텐츠를 오버레이(overlay)하는 ‘증강 영역 기반 서비스’, 오버레이된 증강 콘텐츠를 시청자가 직접 세팅함으로써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증강방송 서비스’, 증강된 거리영상넷 가까운 식당·카페 위치를 오버레이하듯 방송사가 증강영역과 시간을 정의하고 시청자가 TV단말기에서 증강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증강 콘텐츠 제공자 선택 서비스’ 등이 있다.

증강방송은 버라이어티 쇼, 스포츠 중계, 선거방송, 일기예보,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확대 가능한 영역은 무한하다. 하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TV 제조기술과 증강콘텐츠를 접목한 방송제작환경의 혁신이 요구된다.

곽재욱 jokwak@naver.com

새해부터 달라지는 방송심의규정은?

상호·상표 자연스런 노출은 허용…여론조사 보도기준은 강화

올해부터 방송에서 상호나 상표 등의 자연스런 노출이 가능해지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전면 금지됐던 캐릭터 광고의 토막광고 등도 허용된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기준은 보다 엄격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기존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응답률과 질문내용을 반드시 함께 방송하도록 심의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 등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TV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신설되는 내용들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거나 △내용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심의규정에 명문화했다.

앞서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에는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가림처리로 인해 시청자의 물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방송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들의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방통심 의위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그간 전면 금지됐던 관련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 시간대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대(전·후 CM)에는 여전히 금지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방송된 직후 관련 캐릭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캐릭터 산업과 위축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한 셈이다.

곽재욱 jokwak@naver.com

‘공운법 개정안’ 제동 걸리나

미방위 여야 의원 모두 “공운법 개정 반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운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미방위는 12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기재위)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미방위 차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방위에 회부된 바 있다.

지난 11월 13일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현행 공운법 제4조 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산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던 제4조 2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운법 개정안 자체가 공영방송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 구조, 자본보유, 정부보조,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삽입돼 개정안대로 적용한다면 정부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방만 경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개정안일 뿐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KBS와 EBS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기재위에 제출기로 했다. 이번 검토 보고서에는 새누리당 의원 1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새누리당 의원 12명 중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 당시 공동 발의 명단에 포함됐었으나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언론 장악 의도 노골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미방위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은 다시 기재위로 넘어갔다. 기재위는 미방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운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 차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방위의 의견 역시 검토 차원일 뿐 공운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공운법 개정안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개막

“올해 화두는 퀀텀닷 TV와 사물인터넷”



올해 정보 통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세계가 전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가전제품의 꽃이라 부르는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MWC(Mobile world congress),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전시회로 꼽히고 있는 CES는 미국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 주관으로 1967년 뉴욕에서 1회를 개최했으며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로 49회를 맞는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 3,5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CES 2015의 최대 화두는 단연 ‘퀀텀닷(Quantum dot 양자점) TV’다. 차세대 TV로 여겨지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퀀텀닷은 스스로 빛을 내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색 순도 및 광 안전성이 높아 천연색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OLED처럼 천연색에 가까운 100% 수준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한 퀀텀닷 TV는

기존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만 추가하면 된다. 별도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OLED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색재현성을 유지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력도 덜 소모되는 저전력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감을 끌 것으로 보인다.

퀀텀닷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덧붙여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면 OLED TV는 패널 자체가 빛을 낸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광원으로 쓰이는 LED 램프가 필요 없다 보니 훨씬 얇고 가볍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패널 원가 절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퀀텀닷 TV에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퀀텀닷 TV인 SUHD TV를 비장의 무기로 내놓고, 전용 OS인 타이젠을 탑재한 타이젠 TV를 이번 CES에서 공개했다. SUHD TV는 퀀텀닷 TV의 다른 표현으로 삼성전자는 기존 UHD TV에 퀀텀닷 소재 필름을 적용하는 한편 SUHD 리마스터링이라는 자체 화질 엔진을 적용해 SUHD TV를 내놓았다. 전시장 입구에는 65인치, 78인치, 88인치로 구성된 SUHD TV 하이라이트 존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UHD 리마스터링 화질 엔진은 영상의 밝기를 자동으로 분석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블랙 색상을 더 짙게, 밝은 부분은 최대 2.5배 밝게 보여줘 명암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21세기폭스사와 협력해 SUHD TV에 최적화된 콘텐츠인 영화 〈엑소더스〉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퀀텀닷 TV 출시를 공식화한 LG전자 역시 이번 CES에서 퀀텀닷 필름을 적용한 울트라 HDTV를 선보였다. 또한 주력

모델인 OLED TV 부문에서도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55인치 등을 추가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린 5개 시리즈 7종 올레드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CES 2015의 주요 테마가 IoT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업계가 IoT에 주목하고 있다. IoT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IoT라고 이해하면 된다.

삼성전자 역시 IoT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15 전시관 정중앙에 IoT 부스를 마련해 거실·주방·침실로 구성된 스마트홈, 스마트카가 있는 차고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CES에 첫 전시 부스를 마련한 SK텔레콤은 생활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합친 ‘라이프웨어’라는 신조어에 맞춰 스마트 디바이스와 IoT를 결합한 제품을 선보였다. 휴대용 프로젝터인 ‘스마트빔 HD’와 스마트 와이파이 오디오인 ‘핑키지’, 공기 오염도 측정기기인 ‘에어큐브’를 비롯해 총 7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CES에 참가하는 3,500여 개 업체 중 IoT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업체가 약 25% 정도라서 국내 이동통신업계도 CES 방문을 임원들이 직접 행기는 분위기”라며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이번 CES 방문으로 차별적 IoT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존폐 기로 선 지상파 DMB

“지상파 DMB 활성화 위한 제도·법 개정 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화려하게 등장한 지상파 DMB가 사업 악화에 따른 누적적자로 등장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지상파 DMB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수도권 DMB 방송사 광고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DMB 사업자의 광고매출액은 95억 7,600만 원으로 지난 2011년 대비 5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DMB 방송사의 광고매출액은 2011년 173억 1,200만 원, 2012년 120억 2,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손 안의 TV’로 불리며 등장한 DMB는 이동 중에 TV, 동영상, 라디오,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만든 순수 국내 기술로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는 물론 기술 수출 기대까지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무료 방송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 채 가입자 수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앞선 데 났던 격으로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서비스이지만 값질 없고 화질 좋은 N-스크린 서비스가 등장하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 DMB 사업의 주 수입원

이 광고라는 점이다. 그나마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TV 라디오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DMB로 동시 상영함으로써 콘텐츠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 DMB 3사는 누적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조달 등에 추가 비용까지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소 DMB 방송사 누적적자액은 YTN DMB 279억 원, U1미디어 287억 원, 한국 DMB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현 상

황이 지속된다면 중소 DMB 3사 소속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상파 DMB 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이동방송이자 재난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송 플랫폼”이라며 “재난방송 등 공익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양질의 콘텐츠, 고화질 신규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DMB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거 법률 제·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신년사로 보는 2015년 지상파 4사 화두는?

MBC·SBS, 다매체 시대 ‘지상파 방송사 위기’ 지적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 4사의 2015년 신년사가 발표됐다. KBS는 재원구조 안정화와 법적지위 확립, MBC는 다매체 공략 콘텐츠 개발, SBS는 지상파 독과점 조직 문화를 뛰어넘는 발상과 행동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시범 서비스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시작하게 된 EBS는 콘텐츠 능력 강화를 2015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조대현 KBS 사장은 1월 2일 KBS 본관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공개했다. 이날 조 사장은 2015년 KBS의 당면 과제로 △재원구조 안정화 △법적지위 확립 △플랫폼 정책 △콘텐츠 정책 △미션 비전 수립 △제작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한 뒤 구성원들에게 부서이기주의, 기득권 안주 등 이른바 ‘사일로 현상’으로부터 타파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사장은 “현재 KB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BS 조직 문화 즉 기업 문화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또 국민이 원하

는 방송을 하기 위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광한 MBC 사장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가 1조 9,000억 원을 밑돌아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새해 벽두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안 사장은 “콘텐츠의 단순 유통 수익 확대로만 따라잡기에는 벽차고 힘겨운 반면 경쟁자들의 추격은 매섭다”며 “통합시장을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매체를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역량을 끌어올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역시 안광한 MBC 사장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지상파 방송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1월 5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종합편성채널과 모바일로 촉발된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우리가 짐작하고 준비해 온 것 이상의 속도와 크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SBS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상파 독

과점 하의 조직 문화를 뛰어넘는 발상과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본원 경쟁력 회복 △고객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 △새로운 수익 발굴 △열정과 소통 등을 2015년 SBS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섭 EBS 사장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시작에 따른 콘텐츠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신 사장은 1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40여 년 전, 라디오 교육방송을 시작한 이래 EBS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진화해 왔다”면서 EBS의 본령은 언제나 콘텐츠에 있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신 사장은 “새로운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MMS도 역시 EBS’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콘텐츠 개발과 특화에 더욱 전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정교한 콘텐츠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중 FTA 체결, 방송 시장 위기 오나?

‘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 삭제’ 놓고 갑론을박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방송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방송 산업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FTA 이후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국내 콘텐츠 시장이 중국 자본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선의 한국방송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중국 미디어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PD와 작가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 제작사와 공동 제작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국내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자하고 제작사 인수까지 하고 있다”며 중국 미디어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 정책전문위원은 무엇보다 국내 방송 시장의 선순환 가치 창출 사슬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중국 자본

의 국내 진입과 수익 유출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자본이 투입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유통될 경우 대부분의 수익은 결국 중국 자본에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영 성신여대 교수 역시 중국 자본의 위협성에 공감을 표했다. 노 교수는 “제작 기술뿐 아니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지면 나중에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봐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내수 시장에서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방송사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도 외주 제작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다. 이 정책전문위원은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이 장기간 존치되면서 방송사와 외주사가 협력 전략을 통해 윈윈하기 보다는 서로 양보를 받아내는데 집착하는 협력 회피 전략을 구사해왔다”며 “다양한 협

력 제작 모델이 가능토록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중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역시 특수관계자 비율 조정 등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드라마제작협회 등에서는 지금처럼 방송사가 저작권을 독식하는 환경에서 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 콘텐츠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협회 국장은 “드라마 제작사들을 죽이는 정책으로 국내 제작사들은 중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 뒤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방송 시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조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방통위, EBS MMS 시범 서비스 허용

“EBS 허용만으론 시청자 복지 구현 어려워”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전체가 아닌 EBS에 한정된 허용으로 시청자 복지 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EBS에 대해 지상파 MMS를 시범 서비스 형태로 허용키로 의결했다. 또한 KBS의 MMS 시범 서비스 도입도 올해 중으로 다시 검토키로 했다.

MMS(Multi Media Service)는 디지털 지상파 TV 1개 채널에 할당된 6M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고화질(HD) 채널 1개 외에도 1개 이상의 표준화질(SD) 채널과 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압축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지상파 MMS가 활성화되면 지상파 채널이 늘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MMS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 지상파 MMS를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EBS MMS 시범 서비스는 1월 말 편성 개편에 맞춰 전국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기존에 디지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추가로 1개의 채널을 더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서는 기존 지상파 EBS 채널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이 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의 무료 콘텐츠 확대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EBS의 MMS 허용만으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MMS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윤성욱 경기대 교수는 “지상파 MMS의 도입은 선택권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굳이 재미없는 공익적 콘텐츠

로 접근하기보다는 저소득 계층에게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BS 관계자 역시 “MMS의 가장 큰 목적은 시청자 복지인데 그렇다면 시청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르를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상파 방송사 전체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MMS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영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유료 방송 콘텐츠의 지불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의 채널 확장은 시청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상파 MMS가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상파 방송사 모두가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범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시청자의 시청 행태, 기술적 안정성 및 방송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중으로 MMS 보방송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기자수첩

방송기술인들이 할 일

지상파방송이 당면한 수많은 현안은 사안과 사안이 연쇄적으로 뒤얹혀 시원스럽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없는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위기를 맞은 재정난 극복이 선결과제지만 정작 인프라와 재정난을 해결하려 들면 추락한 공공성에 발목을 잡혀 헤어날 수 없는 형국이다.

지상파방송이 주장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 지상파 MMS, 중간광고, 수신료, 지상파 재송신료 등은 공공재로서 방송의 역할수행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이 무료 보편적 전국방송과 UHD방송 실현을 위해 주파수나 MMS를 확보하려 하면 낮은 직접수신율과 콘텐츠의 양적·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나온다.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 수신료, 재송신료 인상 등 재원대책을 내놓아도 동일한 문제에 부닥치고 만다.

지금 지상파의 위기는 단지 내부적 문제가 가지고온 결과만은 아니다. 변화하는 방송환경이 다양한 갈등구조를 양산시켰고, 그러한 갈등구조가

입법부와 규제기관까지 파급을 미쳐 총체적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이다. ‘공공성 실추’를 이야기함에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저널리즘의 위기’. 더욱 큰 문제는 저널리즘의 발을 묶은 정책결정자들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 추진돼야 할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인기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명대사처럼 “판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은 과연 공공성 회복을 위해 어떤 자구책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느 전문가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네버엔딩 스토리’의 종지부는 애초부터 짚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는 답은 결국 하나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 지상파방송의 최대 장점인 직접수신의 방법을 설명하고 어려운 기술적 사안은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는 일, 올해 지상파방송과 그 속에 있는 방송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미래부, 과학기술·ICT 분야에 4조원 투자

‘R&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 9,520억 원(전년대비 7.9% 증가)을 투자하는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5,138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2조 9,037억 원, ICT 분야 1조 483억 원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을 따라 우선 기초연구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해 ‘기초연구 2.0시대’로 도약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양자정보통신, 광소자 부품 등 미래 유 무선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차세대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대용량 클라우드 저장기술 등 SW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

다. 또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반도체, 무인이동체를 위한 SW기술 등 ICT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다부처 협업 기반 유망 미래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기초·원천 R&D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기술개발(R&BD)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한 ICT 표준화도 추진한다. 특히 ICT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경영 멘토링,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부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결의(ICT 융합, IoT)에 대한 ITU 연계활동과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할당제(신규 표준화과제의 약 20% 주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1월 중 개최될 부처합동 4대 권역별 설명회에서 이번 ‘2015년도 과학기술·ICT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R&D 사업을 홍보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미래융합 및 국제중계기술 세미나] 안내

일시 : 2015년 1월 16일(금) 14:00~18:00 (4시간)
대상 : 방송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장소 :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
참가비 : 무료
접수방법 :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38612>)를 통한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 선착순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교육 커리큘럼			
No.	시간	강의주제	강사명 소속
1	14:00-16:00	Future of Spatial Audio: Immersiveness, Interactivity, and Adaptation (미래 공간음향에 관한 고찰: 몰입감, 상호성, 그리고 적응)	김 성 영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로체스터 공과대학교) 교수
2	16:10-16:50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관방송사(하B) 운영	염 정 동 KBS 중계기술국 차장
3	17:00-17:40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신호 제작	김 성 훈 KBS 중계기술국 차장
4	17:40-17:50	설문조사	

강사약력 : 김 성 영
• (현) 조교수, 로체스터 공과대학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 (2007~2012) 선임연구원, (주)아마하, 하마마츠, Japan
• (2004~2009) 박사과정, Sound Recording, McGill University, Canada
• (2001~2004) 석사과정, Sound Recording, McGill University, Canada
• (1996~2001) 라디오기술국, 한국방송(KBS)
• Affiliated member of Center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for Music Media Technology (CIRMMT), Montreal, Canada
주최/주관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문의처 : 02-3219-5640~1

파워인터뷰

주파수 정책의 기본? ... “공익과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역할에는 명확한 구분 있어”

정부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남겨진 700MHz 주파수 용도를 두고 몇 년째 고심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업계에서는 국내 전파 자원의 활용 계획인 ‘주파수 분배표’를 보면 700MHz 주파수 용도가 여전히 TV 방송용으로 표시돼 있고,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난시청 문제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이 대역을 유휴 대역으로 인식하고 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통신 업계에서는 트래픽 폭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를 포함해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용도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우선 활용돼야 함에는 틀림없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첫 주제로 주파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고, 현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파수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김광호 교수를 만나봤다.

**Q 모든 주파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즉 목표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주파수의 분배 및 할당의 문제가 방송통신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선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이 실외로까지 확대되면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전파자원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와 ‘정해진 용도 하에서 누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전파 정책의 중요 과제가 됐다. 과거부터 주파수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공익이었다. 주파수 자원이 희소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분배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좀 더 공익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비교 심사해서 주파수 이용권을 제공했었다. 법적으로 볼 때도 전파는 공공재로서 국가는 주파수라는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국민 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포괄적이고 정서적 차원에서 전파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전파 이용에 있어 공공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파법의 목적을 보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전파법 제1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파법 제3조)로 돼 있다. 즉 주파수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익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 할 수 있다.

Q 현재 주파수 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700MHz 주파수 정책 추진 방향을 평가한다면? 특히 지난해 추진된 주파수 정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700MHz 주파수 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통신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700MHz 주파수 이용에 관한 주파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1월에 발표한 ‘모바일 공개토폴랜 1.0’에서는 2013년까지 700MHz, 1.8GHz 및 2.1GHz 대역 등 3개 대역 170MHz 폭을 확보하고, 시장 수요 및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까지 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했다. 그러나 2012년 9월에는 700MHz 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 이용 실태를 뒤늦게 파악하고는 2013년부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에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하되, 이용자에 대해서는 700MHz 대역을 특정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는 제도 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고 원래의 결정을 후퇴했다.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공개토폴랜 2.0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대역에서 비면허 무선마이크의 이용을 2020년까지 허용한다는 발표를 해 결국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00MHz 대역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40MHz 확보해준다는 계획을 2번에 걸쳐 변경한 셈이 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700MHz 주파수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추진되어 그 결정의 실효성 및 안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난망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사건 발생 후에는 별도의 TF를 만들어 급속하게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망용으로 분배하는 것을 추진해 700MHz 주파수의 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국가 중대 자산인 주파수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급변 700MHz 주파수 사례를 거울삼아 추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 이용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Q 방송 업계는 난시청 해소와 무료 보편적 서비스**확대를, 통신 업계는 트래픽 해소와 글로벌 추세 및 세수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 각각의 근거는 타당한가?**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수신율이 낮고 난시

“현재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SFN이 불가능한 ATSC 전송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같은 방송국 신호여도 중계소가 다르면 상호 간섭을 주기 때문에 많은 채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TV용으로 할당된 38개 채널을 다 쓰고도 주파수 부족으로 중계기 확충이 어렵다.”

청 지역이 존재해 다수의 국민이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SFN이 불가능한 ATSC 전송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같은 방송국 신호여도 중계소가 다르면 상호 간섭을 주기 때문에 많은 채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TV용으로 할당된 38개 채널을 다 쓰고도 주파수 부족으로 중계기 확충이 어렵다. 또한 방송권역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도 없어서 여전히 난시청 지역이 남아 있고, 가정에서 원활한 수신을 위해서는 별도로 옥외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청시설을 이용하여야만 해서 직접수신비율이 낮다. 이처럼 직접수신이 곤란하여 무료인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지상파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에게 무료보편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체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SFN 구성이 가능하고 전송효율이 우수하며 난시청 문제를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지상파 차세대 방송의 전송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방송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700MHz 주파수 대역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에 있어서는 700MHz주파수 대역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가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향후 주파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통신 관련 사업자들은 현재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세에 비추어 2020년경에는 이동통신에 무려 600MHz의 대역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제

기되고 있다. 먼저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할당된 대역 중에 미 할당 된 대역이 157MHz가 존재하고 SKT가 반납해야할 1.8GHz 대역 중 20MHz가 있어 실제로는 177MHz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2G용과 3G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되므로 주파수의 고갈현상은 기우에 불과하며 국내 통신 3사는 해외 주요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보다(1국가 평균 320MHz) 월등히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위 5개 사업자가 쓰는 LTE주파수 용량(190MHz)보다 우리나라 3개 이동통신사업자(200MHz)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의 트래픽 해소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미래의 적정주파수 소요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특히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는 것은 동영상이라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초고화질 동영상 전송에 400Mbps급 서비스를 가정하고 있는데 HEVC 기술을 사용하면 HD급은 5Mbps, 4K UHD조차도 30Mbps 이하의 전송 속도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무선데이터를 보내는 양의 71%가 이동 통신망이 아니라 와이파이(Wi-Fi)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

한다. 모바일 통신망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와이브로, 위성DMB 등 기존 통신용 주파수 중 활용도가 낮아 쓰지 않는 대역을 재활용하거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따른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수요, 현재 상황에 맞는 트래픽 예측치를 이용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추세에 대해서도 실제 세계 각국은 700MHz대역의 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한 주파수를 사용한다. 국내의 ‘모바일 공개토폴랜’은 아시아-태평양-통신협회의 계획인 APT 700 Plan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APT 700 Plan은 세계 주요 모바일 통신 시장의 밴드 플랜과 일치되지 않아 조화가 안 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 세계 어디와도 조화가 안 되는 700MHz 대역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공공주파수 대역인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로 인해 APT 밴드 플랜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도 아직 방송용으로 사용 중이며, 2022년 이후에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과 인도는 TDD 방식을 사용 중이므로 우리나라 방식과 조화가 어렵다.

Q 정부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 그 효율적인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전파간섭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질적 이용가능성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응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그것보다 현재 지상파방송에서 내놓은 의견, 즉 700MHz 대역을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700MHz 주파수를 재난통신과 방송에 우선 배정하고 추후 방송용으로 배정한 주파수를 700MHz 대역 주파수의 국제적 로밍이 필요한 시기에 이동통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아닌가 생각된다. 즉 당장 수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이동통신용으로의 배정 시기를 늦추고 우선 방송에 활용하는 것이 귀중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Q 700MHz 주파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향배에 따라 방송이 가지는 무료 보편적 공공의 미디어 서비스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놓였으며, UHDTV의 발전 주체중의 하나가 지상파 방송이 되느냐를 두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파수 분배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필요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유 주파수’를 먼저 선점해 매각하면 나중에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사용할 주파수가 부족하여 공익이나 공공성 실현이 포기될 수 있고, 또는 그를 위해 다시 사회가 주파수를 재구매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이익 최대화를 최대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파수 정책처럼 가역성이 없는 정책인 경우에 할당된 주파수는 단기간 내 재배치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이득 못지않게 중장기적 전망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공재로 간주되는 전파의 특성상 전파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이 제공하는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전파를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부합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 논의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에서의 방송의 역할이다. 방송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실현하는 것이며 700MHz 대역에 관한 논의 역시 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서비스비용 지불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디지털정보 불평등(Digital Divide)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미래 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방송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라는 측면에서 방송정책과 주파수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등 차세대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실시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700MHz 대역이 기존 디지털방송 주파수 대역과의 연속성, 호환성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 감안돼야 할 것이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양띠해 방송 이슈들

양의 해, 방송 역사를 돌아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청마의 해가 지나고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엄밀히 따지면 음력 1월 1일인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육십갑자로 환산했을 때 천간(天干) 중 을이 청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십이지 동물 가운데 여덟 번째 동물인 양은 예로부터 온순한 성격 덕분에 희생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있어왔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들이 올 한 해 다 치유되고 통합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양의 해에서는 어떤 방송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다.

2003년 계미년(癸未年)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2003.02.18.)
2003년 2월 1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김대한의 방화로 일어난 화재다. 전동차 모두 불탔으며 192명 사망, 148명 부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기술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11년 동안 표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안전 룰탑에볼루션(PS-LTE)으로 기술 방식이 확정되면서 재난망 사업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이라크 전쟁 시작(2003.03.20.)

당시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와 주류 언론들의 이라크 전쟁 보도가 CNN 등 미국 언론을 주로 인용하면서 미국적인 시각에 입각한 보도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걸프전 보도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3사의 보도는 폭격 등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게임을 관전하듯 보도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후 대안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AP

•한류 시작되다(2003.04.)

2003년 4월 일본 NHK 위성채널, 정규채널 등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일본에서 '연사마' 열풍이 일었다. 〈겨울연가〉의 바통을 넘겨받은 〈대장금〉 역시 아시아 전역에 방영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MBC, 국내 방송사상 라디오 디지털 방송 통합 운용 시스템(MIROS) 개발

(2003.05.22.)

•KBS, 뉴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003.05.30.)

뉴스 아카이브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영상 자료를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를 분류, 검색, 가공,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총 사업비 27억 원 규모의 이 시스템은 뉴스 제작, 아카이브 및 통합 부문으로 크게 분류된다. 뉴스 제작 부문은 MPEG-2(IMX)를 기반으로 온라인 영상 수신, EDL 편집, 비선형 편집 및 자동 송출 등 제작의 디지털화를 통한 뉴스영상 제작에 초점을 맞춰 구축됐고, 아카이브 부문은 대용량 저장 장치에 방송 영상을 저장, 관리, 재사용을 가능케 해 기존의 테이프(VCR) 보관에 따른 화질의 열화, 검색 및 재사용의 불편을 극복했다.

•디지털방송 광역시 전환 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및 철야농성 돌입(2003.08.)

정부는 디지털 전환 일정에 따라 6개 광역시 소재 방송국들이 2013년 12월까지 DTV 방송을 시작하고, 2004년 1월부터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HDTV 프로그램을 의무편성토록 했다. 그러나 1997년 말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미국식 전송 방식을 일방 채택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송사들과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은 유럽식 전송방식을 주장했으나 미국식을 원하는 정보통신부와 수장기 제조업체에 밀려 DTV 전송방식이 미국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DTV 방식 변경을 촉구하며 삭발투쟁과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1991년 신미년(辛未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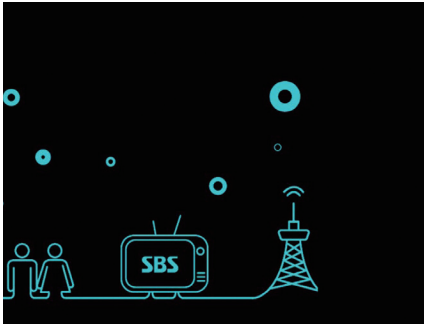
•걸프전 발발 11시간 생방송(1991.01.17.)

1991년 1월 17일 부터 2월 28일까지 이라크 대공습으로 시작된 걸프전 중계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KBS, MBC 등 국내 방송사들도 특집 뉴스를 편성했고, 시사각각 변해가는 이

라크 상황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NN 뉴스를 동시통역하는 등 미국 중심적인 보도 형태를 답습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외신의 추측성 기사를 사실 여부 판단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해 오보가 남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SBS 라디오 개국(1991.03.20.)

1991년 3월 20일 오후 5시 AM 792KHz(호출부호 HLSQ)로 방송됐다. SBS 라디오는 〈여기는 서울방송〉이라는 개국방송을 시작으로 라디오 방송의 출발을 알렸다.



©SBS

•〈TV 문예극장〉TV 드라마 사상 최초 전면 동시녹음제작(1991.06.16.)
1980년 컬러 TV 시대로 진입하면서 ENG 카메라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MBC 〈전원일기〉 송추 야외 촬영에서 30분 분량의 드라마 동시녹음을 시작하면서 동시녹음시대가 열렸다.

•최초로 비행기 내 생방송(1991.08.01.)

KBS 〈생방송, 전국은 지금〉에서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비행기 내 생방송을 시도했다.

•제1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개최(1991.08.27.)

본 전시회는 인텍코리아가 SIBTA&MP라는 명칭으로 8회에 걸쳐 진행해 왔으나, 9회부터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명칭을 KOBTA로 변경하고 전시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



•KBS, 일본 NHK와 방송협력협정 체결(1991.09.30.)

KBS와 NHK는 1991년 9월 30일 일본 동경 NHK 방송사에서 양사 간 방송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방송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KBS와 NHK는 뉴스 자료와 취재편의 제공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동관심사 주제에 관한 공동 제작을 활성

화하는 한편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및 각종 방송 관련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KBS와 NHK는 앞서 1984년 5월 방송협력각서를 상호 교환, 뉴스 자료를 교환하고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바 있다.

•국내 최초 인공위성 무궁화호 통신 방송 제작사로 GE와 금성정보통신 확정(1991.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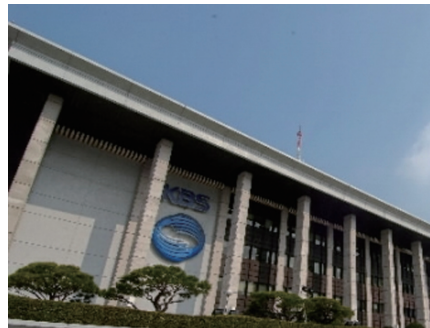
•SBS TV 개국(1991.12.09.)

라디오 방송에 이어 12월 9일 오전 10시에는 채널 6번을 받아 TV 본방송에 돌입했다. SBS 출범으로 방송 구도가 공민영 체제로 바뀌었다. SBS 등장 이후 KBS는 KBS 1TV는 보도와 교양 중심으로 편성하고, KBS 2TV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979년 기미년(己未年)

•TV 시청료 월 600원 인상(1979.02.01.)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 이후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한 TV 수신료는 1964년 월 150원, 1965년 월 200원, 1969년 월 300원으로 인상됐으며, 1973년 한국방송공사 창립 이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개편되면서 1979년에는 월 6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컬러 TV 시대로 접어들면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KBS 93.1MHz FM 스테레오 음악 방송 시작(1979.04.01.)

KBS에서는 1978년 5월 19일 FM 스테레오 음악방송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 각 갑지 방송국에 스테레오 제작 시설을 설치, 스테레오 방송을 도 단위 로컬로 실시키로 하면서 1979년 4월 1일 스테레오 음악 방송을 시작했다.

•첫 ABU 대상 수상작 〈인간승리-소리란 무엇인가요〉 방송(1979.11.17.)

1967년 정미년(丁未年)

•전력 부족으로 오후 8시 이후 TV 방송 중단(1967.06.29.)

북한의 경우 1990년대까지 전력 부족으로 TV 방송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도 1967년에는 전력 부족으로 오후 8시부터 TV 방송을 중단했다. 여름철 전력난으로 인해 한 달 여간 TV 방송 중단이 이어졌다고 한다.

•기자의 뉴스 앵커 시대 개막(1967.08.29.)

구봉광산 갱도 매몰 사건 보도, 1967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대 금광으로 금 생산량의 60%를 차지했던 구봉광산의 천장이 무너지며 광부 김창선 씨는 지하 125m 아래 수직갱도에 매몰됐다.

김 씨는 갇힌 공간에서 전화를 발견하고 복구해 붕괴 3일 만에 가까스로 지상과 통화했다. 이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면서 버티던 중 갱도에 묻혀있던 양수 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 구멍을 넓혀 간신히 빠져 나왔다. 당시 이 구조 현장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구조 과정은 생생한 뉴스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외 전 세계에 방송됐으며 이 사건으로 기자의 뉴스 앵커 시대가 열렸다.



©한국사건기자협회(KJPA)

•KBS와 TBC 드라마 시청률 경쟁 시작
1964년 12월 7일 TBC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시작된 편성 경쟁은 1967년 각사가 7편의 드라마를 편성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양사는 밤 9시 뉴스 전후에 7편의 드라마를 편성해 시청률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1955년 을미년(乙未年)

•대출력 방송 시대 개막(1955.08.)
연회송신소에 최대 출력 100KW 설치공사를 완료해 대출력 방송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 연회방송소는 1932년 8월 6일 공사를 시작해 1933년 4월 26일부터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연회송신소로 바뀌었고, 1971년 3월 31일 소재송신소에서 500KW로 제1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40년 가까이 방송 송출 업무를 한 곳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5년 방송계 전망과 과제

“지상파방송, 시청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방송계 안팎에서 논의됐던 수많은 과제들이 2014년 세밑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대부분 2015년으로 이관됐다. 지난해 방송시장을 뜨겁게 달군 ‘통합 방송법 입법’과 ‘700MHz 주파수 분배’ 등의 사안이 올해 상반기 내 처리 예정에 있으며, 최근 재점화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와 ‘지상파 MMS’ 등의 사안도 해를 넘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방송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망과 과제를 살펴봤다.



정치·자본으로부터 독립 위한 ‘공공성’ 화두

지난해 방송계를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대혼란’이었다. 사업자 간 갈등의 구도가 입법기관과 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방송정책에 대한 입법활동과 규제방향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방송장악 불가’를 선언했던 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정책’ 이외에 방송산업의 위기를 구제할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러한 여당의 의도적인 무기력함과 사업자 간 갈등구도 속에서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올해 방송계는 이러한 갈등구도를 벗어나 자본과 권력의 프레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성’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방송은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구도를 만들어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잃어버린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가 끊임 없이 규제기관을 움직이려고 했던 이유는 현재 방송에 대한 규제방향과 규제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원수가 오렘된 수도 관은 어느 민간사업자가 말아도 수질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지배구조를 바꾸고 내부제작 자율성을 지켜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영방송사들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전망이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와 KBS 이사회, 9월 EBS 이사회가 교체되고, 11월에는 조대현 KBS 사장과 신용섭 EBS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3년 동안 공영방송 사장이나 임원을 할 수 없게 돼 기존과 같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정부여당추천인사가 방문진 이사회는 6대3, KBS이사회는 7대4로 여전히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동진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정권과 자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언론과 방송을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부개입으로, 지상파방송이 뉴스·시사 부문의 경쟁력을 잃고 신뢰가 하락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사회는 방송사 내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모두 엄격한 검증을 거친 상식적인 인물들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곧 시청자 복지”

방송 영역에서 ‘공공성’은 곧 ‘시청자 복지’와 직결된다. 특히 방송계 현안 가운데 700MHz 주파수와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서비스)의 경우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공적 섹터로서 시청자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경제로 끌어들여 사업자 간 경쟁구조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 사무총장은 “정부와 규제기관은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시청자 복지’라는 규제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시장영역에서 밥그릇이 줄어들었다고 반발하는 사업자들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경쟁시킬 것과 공공성을 유지시킬 것들을 정확히 획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원칙과 달리 700MHz 주파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통신편향적 정책은 공공성이 아닌 효율성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이 사실이다. 2015년 미래부 예산안에서 2,080억 원 주파수 경매세입이 포함됐다 여야의원의 질타로 국회 의결과정에서 감액된 데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한 주파수 대역이 700MHz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방통위가 EBS에 한해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허용한 MMS 정책은 700MHz 주파수를 통신 쪽에 배분하기 위한 ‘청와대의 밑그림’이라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난안전망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 내 88MHz 대역에서 지상파방송이 UHD 전국방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주파수 폭은 최소 9개 채널 운영을 위한 54MHz 폭, 그러나 여기서 사후 EBS를 탈락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EBS에게만 MMS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지만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상파방송이 동일하게 MMS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러려면 10여 년 전 MMS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제기돼 왔던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을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원인이 문제해결의 결림돌

지상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재정난을 극복하는 일이다. 지난해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는 1조 9,000억 원을 밑돌아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75%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재송신료, 수신료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 원점으로 돌아가 ‘공공성’이 결림돌로 작용하고 만다.

중간광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제외한 재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바람을 비껴갔다.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총량제는 사실상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사무총장은 “공적 영역이 지상파방송이 재원구조가 약화되는 문제는 막아야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규제완화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면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유료매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반대하는 데는 정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시청자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들의 열악한 재원마련을 위해 중간광고가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노력하는 모습’이 신뢰회복 첫걸음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사들의 이슈인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숙원과제를 성사시키기 유리한 최대 적기가 바로 올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년은 선거가 없어 여야 정쟁의 우려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교체되는 2016년부터는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된다”면서 “다만 원칙적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얼마나 동조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장의 재원마련도 어려운 지상파방송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물음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추 사무총장은 “공공성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고 국민을 무시워하는 것이 공공성이 아니겠느냐”며 “지상파방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장악된 지배구조에 저항하면서 기존의 신뢰와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소장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분쟁에서 낮은 직접수신율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수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데는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상파방송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로써 직접수신율이 제고된다면 UHD와 MMS, 재송신료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29 January, 2015

01

Zoom In Focus

기술이 만드는 미래 방송을 함께

Field Focus

KOBETA, 201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

Broad Sharing

고급의 방송 기술, 멀티플렉서(Multiplexer)의 비평형화

Enterprise News

성방송 환경에서의 4K UHD 실시간 문자 발생기 시스템

New & Abroad

웹미디어의 동향

Back to The Basic Season 1

1세대 4K UHD의 이해 및 활용 10

Savvy & Trend

KBS 장애인 자막방송 시스템 고도화

Tutorial

APPLE Final Cut Pro X Tutorial 4



477-196-4297
ISSN 1976-4297
0115-0008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5년, 방송의 공적기능 회복을 기원하며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널리즘 가치에 해당하며, BBC는 독립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역할로 영국의 문화를 알리고, 작가·감독·제작자 등을 발굴·육성하여 창조적인 콘텐츠를 널리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적 기능이다. BBC의 교육적 가치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청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송에 대한 사명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폭넓게 반영하여 개인과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할 것, 다만 뉴스시사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오락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 사회에 존재하는 정보, 경험, 가치정도, 행동규범의 다양성을 전할 것, 이상을 토대로 민주주의 질서와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명범위를 바탕으로 독일의 기본적인 방송법규인 주간 방송협정에서는 공영방송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개인 및 공공의 자유로운 의견을 형성하는 매체이자 요인으로서 기능할 것, 둘째 유럽·국내·지역의 중요한 사건들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공할 것, 셋째, 국제적인 상호이해, 유럽통합, 연방과 각 주의 사회적인 연계를 촉진할 것, 넷째, 정보·교양·생활정보·오락 등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디지털시대의 공공방송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 정리된 공영방송의 역할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비상업적 재원에 근거하여 확보하고, 둘째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넷째 방송의 기술발전·보급에 기여하며, 다섯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정보화에 대응하여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발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별 공적 기능과 역할을 공통된 영역과 범위로 묶으면 민주적 가치, 투명한 정보제공, 공론장 제공, 다양성 존중, 문화의 보편성, 교육의 보편성, 기술적 이익의 균등화, 지역 간 유대 등 여덟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곧 방송의 공공성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비단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에도 적용된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와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등 태생적으로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으로써 지식과 기술이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넷째 영국 전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다. BBC의 사회적 가치는 영국의 많은 사회단체 및 지자체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다섯째 국제적 기여로, BBC의 글로벌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해외의 시청자들에게 우수한 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 지구적 역할을 지원하게 된다. 여섯째 지상파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에 따른 편익을 공공이 누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

“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와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등
태생적으로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리사회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이 발전해 왔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더라도 공영방송을 기준으로 방송을 평가하곤 했다. 그러나 2014년 국내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의 뉴스는 끝없는 추락을 지속했고, 납득할 수 없는 임원선임과 인사조치들은 수용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기능을 기대하는 것도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어 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임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2015년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회복을 기원하며, 해의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공적 역할 및 가치는 칠퍼장에 여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민주적 가치인데, 민주적 가치는 보도와 시사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년사

을미년(乙未年),방송기술인의 화합과 도약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전국의 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원 여러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연합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무리를 지어 살기에 알맞은 활동력도 적당히 있는 편이어서 사회성도 뛰어나고 공동체 융합도 잘 이뤄진다고 합니다. 특히 청양은 청색의 빠르고 진취적인 특징도 결합돼 있어 2015년 한 해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화합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도 올 한 해 청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하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소치동계올림픽부터 6·4 지방선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ITU 전권회의 등 수많은 이벤트들로 정신이 없었던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울었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망과 오보로 얼룩진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4대 연합회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송기술인의 단결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방송 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했으며,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공개토 플랜의 문제점을 <월간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등 매체를 통해 공론화시키고 10월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 이익 침해하는 미래부 졸속 주파수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모바일 공개토 플랜을 백지화시키고 결국 700MHz 주파수 정책을 국회 논의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을 콘퍼런스를 KOBETA CONFERENCE(KOC)로 새롭게 기획해 방송기술인들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새해에는 24대 집행부 2년 차를 맞아 연합회원분들이 직접 제갈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물론 방송 환경은 점점 산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700MHz 주파수 정책을 통신 편향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도 잠정 표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현장과 상관없이 정해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변경을 위해서도 움직여야 하며, 유료방송에 국한된 기계적인 통합방송법 제정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24대 집행부는 전국의 연합회원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초연장산(礎潤張傘,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의 자세로 새해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합회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연합회원들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주간 이상의	전화 02-3219-5637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안창준, 최권용, 나경록	팩스 02-2647-6813
취재기자 백선하, 객재옥,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트위터 @KOBETA_COM
기획실 강동균	홈페이지 www.kobeta.com
인쇄인 성전&화성프린원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성명서]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 공공서비스를 축소하지 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을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방송인총연합회는 전 국민이 무료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시청자 복지를 저해하면서까지 MMS를 특정사업자에게만 한정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한다.

MMS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현재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음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반발과 견제로 지상파 MMS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으며, 이는 공공·공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MMS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업자에게 UHD방송을 허용하는 데만 머무른다면 이는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의 방송용 배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TTA 총회에서 지상파 UHD방송의 첫걸음인 UHDTV 기술표준이 700MHz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려는 미래부와 700MHz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통신사업자의 입김으로 인해 부결된 것과 동일선상의 정책적 꼼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MMS를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한다면, 이는 현재 HDTV 서비스를 실시 중인 주파수에 여러 지상파방송을 묶어 MMS 서비스를 실시한 후 남은 주파수로 UHD방송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라면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돌로 나눠 축소하려는 후진국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방송인총연합회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이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공공성 확보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유료방송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의 기형적 방송환경은 그동안 정부가 행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유료방송 편향 정책을 고착화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하러 하고 있다.

우리는 MMS를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당장 MMS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조기 서비스 실시를 허용하고, 이것이야말로 시청자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주지하라. 아울러 방송표준을 정하는 통신재별 위주의 TTA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지상파 MMS와 UHD·700MHz를 연계하려는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

2014년 12월 22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Next!!

KOBASHOW 2015



25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5.05.19-22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ufi
Approved
Event

산업통상자원부